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조용성 정책위원 / 환경정의시민연대 에너지 대기분과

1. 서론

지난 달 중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6차 당사국총회(COP6)에 참석한 우리나라의 기본입장은 여느 회의 때와 동일하게 가능한 감축의무부담을 회피 혹은 연기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국내산업의 보호라는 측면에선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우나, 지난 ASEM회의에서도 재차 확인된 바와 같이 전 세계는 바야흐로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독 우리나라만이 자국의 경제성장 및 산업 보호라는 논리로 세계적인 추세인 온실가스감축을 계속 연체까지도 지연시키는 것은 시대의 조류에도 안맞을 뿐더러 그러한 정책방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선진국들이 가만히 방관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의무부담시기가 언제일 것인가 하는 점은 불확실해도 결국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을 수용해야만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지금부터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에 대해 면밀히 연구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아울러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고, 또 정부정책에 얼마만큼 호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근간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1년간의 기후변화협약관련 정부의 대처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고 향후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점들이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2. 설문조사개요

본 설문조사는 기후변화협약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의 경우에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 및 ESCO기업의 관련업무 담당자, 총리실 산하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의 4개 정책연구팀원 및 환경관련 연구소 연구원과 교수 등 19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0년 10월 9일부터 동년 10월 14일까지 6일간 실

시되었고, 전문가별 표본수는 <표 1>과 같다. 그리고 전문가대상 설

<표 1> 표본의 분포

전문가		
직종	표본수	비율
연구원	14	7.4%
공무원	12	6.4%
회사원	132	70.2%
교수	30	16.0%
합계	188	100%

문조사로부터 얻은 유효표본수는 188개이다.

3. 설문자료 분석

가. 국내 환경오염도 및 관련 정부대처에 대한 인식

국내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다수의 응답자들(80%)이 국내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및 ESCO기업의 환경관련 업무 담당자들(이하 '사무직'으로 통칭)보다 대학교수 및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하 '전문직'으로 통칭)이 국내오염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보다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대처에 대해 응답자 10명중 6명이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단지 6.4%만이 정부대처가 적절

<표 2> 국내 환경오염도 및 관련 정부대처에 대한 인식

	사무직	전문직	전체응답자
■ 국내 환경오염도에 대한 인식			
매우 심각하다	15.9%	25.0%	18.6%
심각하다	59.1%	66.1%	61.2%
보통이다	23.5%	8.9%	19.1%
그리 심각하지 않다	1.5%	-	1.1%
■ 국내 환경문제 관련 정부대처에 대한 인식			
잘되고 있다	6.9%	5.4%	6.4%
보통이다	34.4%	23.2%	31.0%
잘 안되고 있다	58.8%	71.4%	62.6%
응답자수	132	56	188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사무직 응답자의 59%가 정부대처가 적절치 못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직 응답자중 정부대처가 미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71.4%에 달하고 있다.

나. 기후변화협약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응답자의 거의 모두가 기후변화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칠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에 미칠 파급효과 역시 클 것이라는 점에 응답자 10명중 9명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매우 중요한 사안인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98년 4월 총리실 산하에 '기후변화협약관련 범정부 대책기구' 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표 4〉에 나타나 있듯이 '98년 4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관련 범정부 대책기구' 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약 54% 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후변화협약관련 범정부 대책기구'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에너지산업대책반 등 5개 대책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약 33%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중 일부는 자신들이 5개 대책반 중 어느 한 특정 대책반에는 소속되어 있어 해당 대책반의 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다른 대책반들과

동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5개 대책반 활동이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기후변화협약관련 범정부 대책기구' 및 범정부대책기구 산하의 5개 대책반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에게 동기구들의 그간 활동 및 역할에 대해 10점 만점으로 평가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기후변화협약관련 범정부 대책기구' 에 대해서는 평균 5.2점, 그리고 대책반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해서는 평균 5.5점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는 동기구들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일반시민들의 평가가 아니라 실제로 해당 기구와 대책반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략의 적절성 여부, 홍보활동, 전문가 활용도,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대책, 자발적 협약의 실효성 및 기업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준비도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자발적 협약을 제외한 기타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응답자 10명중 7명은 현재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략이 적절치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직 응답자들의 경우 80% 이상이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표 3〉 기후변화협약의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

평가항목	사무직	전문직	전체
■ 기후변화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칠 파급효과 정도			
클 것이다	95.5%	98.2%	96.3%
작을 것이다	4.5%	1.8%	3.7%
■ 기후변화협약이 기업에 미칠 파급효과 정도			
클 것이다	93.2%	89.3%	92.0%
보통일 것이다	3.0%	5.4%	3.7%
작을 것이다	3.0%	3.6%	3.2%
잘 모르겠다	0.8%	1.8%	1.1%

의 정보교류 및 연계가 안되어 있는 관계로 그 외 다른 대책반의 활

〈표 4〉 범정부대책기구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사무직	전문직	전체
범정부대책기구를 알고 있는 응답자 비율	53.8%	53.6%	53.7%
범정부대책기구의 활동 및 역할에 대한 평균 평가점 (10점 만점)	5.32 (1.88)	4.93 (1.91)	5.20 (1.89)
범정부대책기구 산하 5개 대책반을 알고 있는 응답자 비율	31.1%	37.5%	33.0%
범정부대책기구 산하 5개 대책반의 활동 및 역할에 대한 평균 평가점 (10점 만점)	5.48 (1.73)	5.45 (1.79)	5.47 (1.74)

주: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표 5〉 정부의 기후변화협약관련 대응조치별 평가

평가항목	사무직	전문직	전체
■ 정부의 기후변화협약/교토메카니즘 대응 전략의 적절성			
적절하다	33.0%	19.6%	28.8%
적절치 못하다	67.0%	80.4%	71.2%
■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관련 홍보활동			
잘 되고 있다	11.4%	7.1%	10.1%
보통이다	18.2%	10.7%	16.0%
잘 안되고 있다	66.7%	73.2%	68.6%
모르겠다	3.8%	8.9%	5.3%
■ 정부의 관련 전문가 활용도			
잘 되고 있다	15.2%	16.1%	15.4%
보통이다	12.9%	17.9%	14.4%
잘 안되고 있다	46.2%	41.1%	44.7%
모르겠다	25.8%	25.0%	25.5%
■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대책			
잘 되고 있다	14.5%	3.6%	11.2%
보통이다	12.9%	17.9%	14.4%
잘 안되고 있다	46.2%	41.1%	44.7%
모르겠다	25.8%	25.0%	25.5%
■ 자발적 협약의 실효성			
잘 되고 있다	69.7%	41.1%	61.2%
보통이다	0.8%	1.8%	1.1%
잘 안되고 있다	19.7%	32.1%	23.4%
모르겠다	9.8%	25.0%	14.4%
■ 기업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준비도			
잘 되고 있다	17.7%	5.4%	13.8%
보통이다	14.4%	5.4%	11.7%
잘 안되고 있다	58.8%	78.6%	68.6%
모르겠다	12.1%	10.7%	11.7%

있는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온실가스 대책과 관련하여 사무직 응답자의 58% 그리고 전문직 응답자의 73%는 '잘 안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산업부문 온실가스 대책들 중의 하나인 자발적 협약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10명중

6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다수 응답자들은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관련 홍보활동 역시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그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점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매스컴 보도 혹은 홍보물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후변화협약의 내용 및 파급효과 그리고 정부의 대처 등에 대해서는 10명중 2명도 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즉, 정부의 홍보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긴 하였으나 홍보활동이 피상적으로 그쳐 홍보의 실효성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준비도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63%가 기업의 준비도가 낮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사무직 응답자의 58%가 기업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준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점은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또 응답자들 스스로가 기업에서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감안할 때 다른 누구의 평가보다도 더 신뢰성이 있는 평가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 감축의무부담 여부 및 시기에 대한 여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수용 여부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 10명중 7명 이상이 감축의무부담을 수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감축의무부담시기와 관련해서는 의무부담을 찬성하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 나타나 있듯이 의무부담을 찬성하는 전문가들 중 40%는 제1차 공약기간(2008년~2012년)부터 의무부담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었고, 또 다른 35%는 제2차 공약기간(2013년~2017년), 그리고 16%는 제3차 공약기간(2018년~2022년)에 의무부담을 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수락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의 75%가 온실가스감축에 따른 의무부담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거나(51.2%) 기후변화문제는 선진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31.7%)라는 견해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수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들은 사무직 혹은 전문직에 따라 약간의 상이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향후 우리나라 정부가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기후변화협약관련 대응책으로써 온실가



스 저감기술의 개발(52.1%) 의무부담 시기 및 부담방안 연구(44.1%) 배출통계체제의 구축(36.2%) 순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요약 및 시사점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대책이 아직까지는 미진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정부가 현재 실시 혹은 계획하고 있는 제반 대책들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의 대표적인 기후변화협약 관련 대책은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5개 대책반을 두어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사안별로 대책을 강구 추진토록 하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동기구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서 '범정부대책기구'는 10점 만점기준에서 평균 5.2점 그리고 대책반의 활동 및 역할에 대해서는 평균 5.5점을 받았다.

또한 전문가 응답자의 71.2%는 정부의 기후변화협약/교토메카니즘 대응 전략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으며, 69%는 정부의 홍보 활동이 잘 안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63%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대책이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정부가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략 및 정책수립 그리고 정책의 보완시 꼭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수락여부문제와 관련하여

<표 6> 감축의무부담 여부 및 시기에 대한 여론

평가항목	사무직	전문직	전체
■ 감축의무부담에 대한 찬반여부			
찬성	76.2%	81.8%	77.8%
반대	23.8%	18.2%	22.2%
■ 의무부담시기			
제1차 공약기간	43.4%	32.6%	40.1%
제2차 공약기간	36.4%	32.6%	35.2%
제3차 공약기간	11.1%	25.6%	15.5%
제3차 공약기간 이후	9.1%	9.3%	9.2%

<표 7>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수용에 반대하는 이유

이유	표본수	비율
기후변화문제는 선진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13	31.7%
온실가스감축에 따른 의무부담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위축될까봐	21	51.2%
장기적으로 정부가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1	2.4%
기타	6	14.6%

<표 8> 기후변화대책 중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대책

기후변화협약 관련 대책	사무직		전문직		전체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배출통계체제 구축	39	29.5%	19	51.8%	68	36.2%
전문가 육성	42	31.8%	19	33.9%	61	32.4%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71	53.8%	27	48.2%	98	52.1%
의무부담 시기 및 부담방안 연구	61	46.2%	22	39.3%	83	44.1%
대국민, 대기업 홍보 강화	51	38.6%	13	23.2%	64	34.0%
총응답자수	132		56		188	

여 전문가들의 78%가 감축의무부담 수락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무부담시기와 관련하여 특정시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선호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략 전문가 10명중 7명 이상이 제3차 공약기간이 시작되는 2018년 이전인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혹은 제2차 공약기간(2013~2017년)부터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향후 정부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 들로는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개발과 의무부담 시기 및 부담방안 연구라는 점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